

# WORKERS' COMP

ISSUE PAPER

CHECK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 ●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은 산재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노동자가 사고나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그 노동자의 인생 경로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 산재보험은 매우 심각한 제도적 흠결을 지니고 있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결정되기까지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 기간이 227.7일에 이르렀다. 산재 처리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되기 전까지 산재 노동자는 스스로 치료비, 병원비 등을 장기간 책임져야 했고, 이 경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생활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설계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하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이하 ‘단축 방안’이라 함)’을 발표했다.

단축 방안은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결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담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에 평균 120일까지 단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장기화 이유

### ① 특별진찰 소요 기간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특별진찰에 드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단축 방안은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근골격계 질병이 다수 발병하여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직종(32개)의 경우,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재를 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타 직종에 대해서도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장기화 이유

### ② 역학조사 소요 기간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의 평균 역학조사

기간을 살펴보면, 2023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952.4일, 직업환경연구원이 588.1일에 이르렀다. 단축 방안은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노동자가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재를 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 ● 제도적 중복 해소로 처리 기간 단축

기존에는 노동자가 특별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확인받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특별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확인받은 노동자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신속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과  
근로복지공단의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지지 못한다면,  
자칫 신속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심의를 다시 받을 기회를 부여받는다라는 제도적 장점이 있었으나, 제도적 중복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단축 방안은 특별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노동자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재를 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살펴본 제도적 장점은 살리면서 산재 처리 기간은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그 결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충실한 심의를 위한 심의 시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 추정 적용의 경우에는 특별진찰·역학조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재 결정

추정 적용이란 특정 질병들에 대해서 유해요인 노출수준, 근무기간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추정 적용을 활용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단축 방안은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탄광부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 등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특별진찰·역학조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산재를 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 및 상병을 중심으로 추정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역량 강화

산재 신속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과 근로복지공단의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지지 못한다면, 자칫 신속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단축 방안에서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지역본부·지사 64곳에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직업성 암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서울지역본부에 전담 조직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축적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 ● 산재 처리 지연 해소 및 제도 개선

기존 산재 처리 절차의 문제로 인해 장기 미처리 사건들이 누적된 상황이다. 단축 방안은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여 장기간 미처리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산재 신청 및 불승인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서 노동자가 전문성 부족,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단축 방안은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 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소송 과정에서 공단의 비합리적인 상소로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단축 방안은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의 상소 제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소 제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 ● 결론을 대신해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단축 방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제도 개선안이 그러하듯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달성할 수는 없다.

분명한 사실은 단축 방안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기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노동자를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단축 방안의 구체적 내용들이 계획한 바대로 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